

### 제3회 경제학과 자연법 정치철학의 만남-로스버드의 “자유의 윤리” - 경제학과 자연법 정치철학의 만남-로스버드의 “자유의 윤리”

김이석

로스버드의 “자유의 철학”은 로스버드가 전개한 윤리이론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점에서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할 특별한 책이다.

우선 가치중립성, 가치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윤리’를 다루겠다는 시도 자체가 특별하다. 아마도 규범이나 윤리를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의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예단하고 그의 책을 읽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을지 모른다.

둘째,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과격하거나 근본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관련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와 세금을 필요악으로 보고 ‘최소국가’에서 멈추었지만, 그는 국가와 세金の 본질을 ‘폭력에 바탕을 둔 더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국방, 치안 서비스도 자발적 교환에 의해 거래되는 anarcho-capitalism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유의 윤리를 검증이 필요한 가설적인 수준에서 시도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돌에 새기듯이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Knock-Out Argument) 그만큼 만약 그의 독자가 그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의 논리 전개에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독자는 그가 내린 ‘과격한’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비록 그게 자신이 평소에 수용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넷째, 로스버드는 누구보다도 그의 스승 미체스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미체스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나 결론을 내림으로써 미체스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특히 ‘자유의 윤리’는 공리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 미체스와도 ‘결별하며’ 자연법에 기초해서 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미체스와 결별하기를 원치 않는 오스트리언에게도 로스버드는 하나의 도전이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강조하고 관습을 누대에 걸친 지식의 집합으로 보았던 하이에크와 달리 미체스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학문적 논의를 무엇보다 중시했는데, 이런 미체스로부터도 달랐던 로스버드는 하이에크와는 당연히 너무나 많이 달랐다. 로스

버드는 관습 속에 들어 있는 기득권의 폭정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 금지라는 관습이 있고 이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실정법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이런 관습이 경제학자가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정보의 집합체로 본다면,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금지한다면,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하이에크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확실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헤로스버드는 이 실정법이 ‘anti-libertarian’ 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강제’ 개념의 모호성과 법의 보편성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로스버드의 비판도 예리하다. 그는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것만 강제이며 여타의 것들은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의미를 제시한다.

다섯째, 미제스가 가치중립적 공리주의 경제학에 근거해 자유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그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경제학만으로는 자유주의를 옹호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반드시 ‘자유의 윤리’가 제시될 때 비로소 그 근거 위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섯째, 그의 자유의 윤리는 철저하게 ‘정의로운’ 정당한 재산에 대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정의의 이론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그래서 자유의 윤리는 법 이론에 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개의 글에서 호페가 말했듯이 이런 그의 법 이론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시카고학파의 ‘법과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결국 로스버드가 자유의 윤리를 집필하게 된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론’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국방과 치안 서비스의 생산에만 국한된 정부가 최소정부라고 보더라도, 안전의 생산에 대한 자발적 교환의 시장과 그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수요자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의 수준과 구성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소국가가 최소국가에 머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이에 근거해서 세금을 가져가는 정부가 폭력적 독점을 넓혀가려고 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가? 무엇이 최소국가인가?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세금에 의존하는 최소국가가 다른 사람들의 물리적 폭력을 막는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아닌가?

우편, 화폐 등을 독점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손쉽게 감시하고 재정을 확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법, 군대, 경찰, 법정뿐만 아니라 사유지가 아닌 토지 등을 독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평판이 만들어지면 완전히 경쟁적인 판결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당할 수도 있을 때,

그런 평판 아래에서도 계속 재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에 비해 고객들이 억울하지 않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로스버드는 세금소비자들이 그들의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적 경호인들’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로스버드 같은 지식인들을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버드의 지적 용기와 많은 어려움에도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것이 놀랍다.

특히 로스버드는 ‘자신의 인신에 대한 자신의 소유’ 원칙과 무주물 선점을 통한 사유의 원칙(로스버드는 이런 원칙이 없고 무주물이 모든 이의 공유이며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무주물을 처분할 수 있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는 로크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이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원칙들을 기초로 리버테리언 사회의 법과 윤리의 뼈대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 책의 2부 자유에 관한 이론에 포함된 제목들을 보면, 크루소 사회철학; 자발적 교환; 소유권과 침해; 재산과 범죄성; 토지 절도의 문제; 자기방어; 처벌과 비례성; 아이들의 권리; 재산권으로서의 인권; 뇌물; 불매운동; 재산권과 계약이론; 구명정 상황; 동물들의 권리 등이다.

로스버드가 인정했듯이, 논리를 기초로 어떤 수학자가 만든 이론은 논리를 기초로 했더라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듯이, 로스버드의 이론에도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가 틀렸다고 선언해서는 곤란하다. 그 수학자의 이론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으로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왜 틀렸는지 혹은 아직 논쟁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 논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리버테리언 안전 서비스 회사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도 마치 정부만이 재판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 법정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듯이 결코 완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생각하는 낙태에 대한 리버테리언 윤리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논쟁적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범죄 용의자에게 고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럴 것이다.

이 독후감과 같은 유형의 이 짧은 글이 로스버드의 날카로운 논리가 만드는 분석이 지닌 힘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다. 아무튼 그는 윤리 상대주의와 규범에 대한 논의를 비과학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유행일 때 그런 상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의 윤리를 썼다. 로스버드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경제학, 법학, 윤리학(정치학) 등을 통합해서 튼실한 일관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로스버드의 자유의 윤리의 가장 큰 강점은 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개념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그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 책의 4부 자유에 대한 여타 현대 이론들에 실린 장들을 보면 잘 드러난다. 그만큼 공부가 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제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한국 사회에 로스버드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는 매우 큰 의문이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의 논리가 옳은 지, 그리고 다른 이론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지부터 따져나가야 할 것이다.